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별세를 애도한다

11월 9일(월) 저녁,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이 향년 83세로 별세했다. 1년 간의 투병 생활 끝에 더 이상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평소 뜻에 따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체를 털어서 자신이 세운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영면에 들었다고 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밝혔다.

언론에서는 비운(悲運)의 경영인, 세계경영의 기업인 등 김 전 회장에 대한 추모와 행적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1936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나 김 전 회장은 한국전쟁으로 부친이 납북된 이후 서울로 올라와 당시 명문 학교인 경기중과 경기고를 거쳐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60년 섬유회사인 한성실업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김 전 회장은 만 30세인 1967년 자본금 500만원, 직원 5명으로 대우실업을 창업했다.

1979년 새한자동차 회장, 1982~1999.11. 대우그룹 회장,

1999. 2~1999.10. 제25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축구협회장, 한국기원 총재 등을 역임했다. 김 전 회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 우뚝 섰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도덕한 경영자로 내몰리는 등 영욕(榮辱)의 세월이 접찰했다. 그가 일군 대우그룹은 한때 현대그룹에 이어 자산규모 21조, 2위에 올랐으나 1999년 과도한 부채와 유동성 부족으로 해체됐다. 근대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글로벌 청년 경영인들을 양성하는 일을 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사업을 하려면 정치인과의 인연이 중요 변수가 되는 수가 많다. 사업 초기 김 전 회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밀월(蜜月)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보고서에도 담겼을 정도다. 2017년 기밀 해제된 CIA의 '한국: 과도기의 경제적 의사결정' 문건에는 김 전 회장과 관련된 '대우의 성공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 전 회장의 각별한 관계

에 따른 개인적 도움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문건은 '각별한 관계'가 김 전 회장의 선친 때부터 시작됐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의 선친인 우당 김용하 선생은 대구사범학교 교사를 지냈는데,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그의 제자였다.

김 전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도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한 때, 정경유착(癒着)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큰 나무는 그늘도 크고 짙은 법이다.

시골 출신으로 1970년대에 서울에서 어렵게 대학을 다닌 나는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하여 생각나는 추억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방에서 가장 좋은 새마을 열차는 비싸서 못타고, 무궁화 열차나 비둘기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리면 서울역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거대한 대우그룹빌딩을 바라보는 충격과 신선함이다. 서울 애도 고층빌딩이 드문 시절에

‘잘 살아 보세’ 경제 개발의 상징처럼 서울역 정문을 나서는 국민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인상적인 건물이었다.

들은 오래 전 어느 모임에서 몇 차례 만나서 평화를 주고 받으며 인사한 기억이 있다. 몇 년도 어느 모임인지는 기억에 없다. 하얀 백발에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百戰老將)의 비범한 풍모를 잊을 수 없다. 수십 권의 명함철을 모두 찾으면 김 전 회장의 명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서 전셋집을 정전하느라고 책과 집이 많아서 고향으로 보내서 알 수 없는 박스 속에 들어 있다. 셋은 그의 저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와의 만남이다. 그 책을 읽고 시야를 넓히는 많은 감동을 받아서 책을 사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많이 선물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했던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처럼 김우중 대우그룹 창업자도 맨주먹으로 도전하여 수많은 시련과 실패를 마침내 이겨내고 신화를 창조한 인물들이다. 김 전 회장은 한 시대를 주도했던 사업가, 한 때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경영인, 대우그룹은 해체되었지만 개발도상국가의 힘든 시절에 '세계 경영'의 당찬 꿈과 도전과 용기를 국민들 가슴 속에 심어준 위대한 선구자였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깊은 애도를 보낸다.

社說

공수처법 연내 처리돼야 한다

국민 3명 중 2명은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치권은 이같은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또 국민의 65.8%가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29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DNA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장'과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1%가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다. 모든 성별과 연령, 지역, 이념성향에서 절반 이상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수처 기소권의 범위와 관련해선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65.6%)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부여해야'(18.4%),

'판사·검사·고위직경찰 정도 까지만'(12.2%) 응답이 뒤를 이었다.

검정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응답자의 59.4%가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므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게 수사를 끝낼 권한을 쥐어한다는 응답은 46.1%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42.8%와 팽팽하게 맞섰다.

지방검찰청 해당 지역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는 주민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53.6%,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46.6%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게 현실이다. 정치권은 이같은 국민들의 열망을 도외시하지 말고 반드시 공수처법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 공장, 작업장 등 화재예방에 만전을

겨울철을 맞아 일부지역에서는 눈이 내리는 등 전국적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가 난방기 등 전열기구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화재발생 우려가 높다.

특히, 지난 2008년 40명의 인명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를 교훈삼아 겨울철 공장 및 작업장 등에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공장 및 작업장 등에서는 위험

물, 전기, 가스 등 가연물질을 많이 취급하고 있어 일단 공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고, 그 피해도 생산중단으로 이어져 실로 측정하기 어렵다.

공장 및 작업장 등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 규모에 맞는 소방시설을 철저히 완비하고 소화기 및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에 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유사

시를 대비한 자체소방조직의 운영내실화 및 공휴일 안전관계자 비상조 편성 등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자.

또한, 위험작업(화기, 용접, 고압전기, 유독물취급 등)은 사전허가와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작업을 개시하며 화재발생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화기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방화에 대한 철저한 확인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자.

아울러, 용접작업시에는 인근

에 소화기 등을 근접 배치하고 불티가 인근 가연물이나 위험물 등에 튀지 않도록 주의하며 담뱃불로 인한 화재의 예방을 위해서 종업원들의 흡연 장소를 안전한 곳에 설치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자.

화재는 타인의 집이나 건물에서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재난이다.

평소에 공장 및 작업장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귀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자.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민체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응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